“원자력 발전, 친환경 에너지”… 원전 신규건설·운전 시행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초안 공개
환경피해 방지, 안전성 확보 조건
신규건설·계속운전 허가설비 대상

2050년까지 세부계획 수립해야
원전설비 ‘녹색 경제활동’ 인정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전력원(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원전의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서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안정적 전력 수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 초안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 등의 원전 경제활동 부분이 포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전력원으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EU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이후 우리 정부도 국내여건을 감안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로 포함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촉발된 각국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등 국제 정세를 반영해 한국형 택소노미에도 원전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이나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가 대상이다.

여기서 원전 설비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 보유, 2031년부터 모든 원전 설비에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는 내용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 과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의 경우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도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조 과장은 “한국형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전·후방 원전 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초안 공개 후 에너지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부처,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中, 기준금리 LPR 동결… 세계적 긴축에 ‘딜레마’

〈대출우대금리〉

차이나 뉴스&리포트

美 등 주요국 자이언트 스텝 예고
인민은행, 통화 완화… 효과는 미미
투자·소비 없이 쌓아 두기만 해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침체된 경기만 놓고 보면 추가 금리 인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만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 이번주에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혹은 적어도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다. 이미 심리적 저항선 수준까지 가치가 떨어진 위안화도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LPR을 1년 만기 3.65%, 5년 만기 4.3%로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매달 20일 전후에 18개 시중은행이 보고한 금리를 취합해 LPR을 고시한다.

동향을 취합한다고 하지만 인민은행이 정책 지도 등을 통해 금리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정책자금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75%로 동결하면서 LPR도 동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LPR은 MLF 금리에 은행 조달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MLF 금리는 보통 LPF의 예고편으로 인식된다.

앞서 인민은행은 1년물 LPR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과 8월에, 5년물은 1, 5, 8월에 각각 인하한 바 있다.

통화 완화에도 효과는 미미하다. 풀린 유동성이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과 가계 쌓아두기만 하는 탓이다. 지난달 경제지표가 일부 개선됐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 대외환경도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10개국 안팎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지 결정한다. 특히 연준은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의 같은 채권 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尹, 미국 뉴욕 도착 ‘복합적 도전’ 관련 유엔총회 기조연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법으로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유엔 중심 연대를 제안한다.

이와 함께 핵비확산 체제 존중 원칙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 등에 기반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메시지에 대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는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법의 모색”이라며 “펜데믹,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전쟁 등 이 모든 것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로, 이에 대한 참신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게 이번 유엔총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연설 메시지는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하자, 경제·기술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국가 간) 윈윈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금호석화, 1500억 자기주식 소각 결정

27일 소각 예정… 주주환원 실천

금호석유화학이 1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소각을 결정하며 지난 해 약속한 바를 지켰다.

20일 금호석유화학은 이사회를 통해 1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완료하고 오는 27일 소각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3월부터 최근 9월까지 약 6개월간 신탁계약을 통해 소각목적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실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이상 앞서 지난 7월 초에 총 66회에 걸친 자사주 매입을 조기 완료했다.

이번 소각 대상 자사주는 총 98만1532주로 전체 보통주 발행주식 수의 3.2% 규모로 금액으로는 약 1500억원이다. 이는 별도 당기순이익의 15.2%에 달하는 규모다. 금호석유화학 측에 따르면 이는 지난 해 금호석유화학이 별도 당기순이익의 5~10%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사용한다고 발표한 계획보다 5%p 이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배당금 역시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주당 1만원과 1만50원으로 총 약 2809억원을 집행했다. 이번에 소각을 진행하는 자사주 규모와 배당금을 합치면 총 주주환원 금액은 별도 당기순이익의 43.7%인 총 4309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당사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지난 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것은 회사를 믿고 성원해준 주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주환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특히 이번 결정은 올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박준경 영업본부장 부사장의 첫 이사회 활동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리 2%p 상승시 한계기업 9.5%p 증가

›› 1면 ‘고금리에 피 마르는’서 계속

금융지원대상자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대출원금 상환과 이자납입이 미뤄지면서 기업대출 잔액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금융지원으로 겨우 버티는 차주들도 분명히 있다”며 “당장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업자의 다중채무 부실문제가 드러나면서 금융권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에 부실우려↑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은행의 기업대출 부실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0%로 지난해 8월(0.75%)과 비교해 1.75%포인트(p) 상승했다. 미국과의 과도한 금리차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맞춰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을 강행할 경우 부실기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계기업현황과 금리변동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2%포인트(p) 상승할 경우일시적 한계기업은 9.5%p, 추가 이자비용은 17조9200억원 증가하고, 3%p 상승할 경우 일시적 한계기업은 13.1%p, 추가 이자비용은 26조88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확대하기 보다는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KD미래전략연구소 박찬우 연구위원은 “대출금상환자금과 운전자금 등 기본적인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외부충격 발생시 잠재적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금리상승 등 경영환경악화로 한계기업 또는 잠재적 부실기업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